

영국 2011년 노동시장 전망: 낮은 경제성장률, 감원, 임금동결 ... 곳곳에 악재

이정희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과정(노사관계))

■ 머리말

‘크리스마스 악몽’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지난해 10월 20일 발표된 긴축재정안(Comprehensive Spending Review)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고 한파가 몰아쳤다. 영국일반 노조(GMB)에 따르면,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리하고 절차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거나 재취업 상담 등을 알리는 편지를 일제히 발송했다. 노팅햄셔 카운티카운슬에서 사회서비스 행정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제니스 데이비스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포함한 동료 10명이 한꺼번에 정리하고 위협에 처해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요즘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¹⁾. 이미 영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 중 하나인 버밍햄 시청이 현직 노동자의 1/3 수준인 7,000명을 해고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필두로 랑카스터(6,000명), 리즈(3,000명), 글라스고우(3,000명), 더비셔(2,000명), 콘월(2,000명) 등이 인원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GMB는 전했다. 이미 지난해 9~11월 석 달 동안 정리하고 당한 인원은 15만 7,000명에 달한다²⁾.

1) BBC 2010년 12월 24일자 ‘Christmas jobs misery for public sector workers’
<http://www.bbc.co.uk/news/business-12066537>

공공부문의 감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전문기관인 영국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가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Employee Outlook Survey)³⁾에서 응답자의 1/5이 “올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감원 한파뿐이 아니다. 임금동결도 이어질 전망이다. 영국상공회의소(BCC)가 지난해 말 4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⁴⁾에서, 응답업체의 절반 가량(49%)이 올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응답했다.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응답은 절반도 못 미치는 45%였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응답(6%)을 포함하면 영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임금을 삭감 또는 동결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 통계와 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 보고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분석 및 대응 등을 중심으로 올해 영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전망해 본다.

■ 경기지표로 본 2011년

먼저 올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자. 1월 25일 영국통계청(ONS) 발표⁵⁾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이코노미스트들의 플러스 성장 예상을 뒤집고 -0.5%를 기록했다. 영국의 GDP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추락하다가 2009년 4분기에 처음으로 플러스

2) Personneltoday 2011년 1월 19일자 ‘UK unemployment rises to 2.5 million’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2011/01/19/57256/uk-unemployment-rises-to-2.5-million.html>

3) Personneltoday 2011년 2월 4일자 ‘One-fifth of workers believe they may lose jobs’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2011/02/04/57327/one-fifth-of-workers-believe-they-may-lose-jobs.html>

4) Finance Markets 2010년 12월 29일자 ‘BCC survey reveals 2011 pay freeze for many companies’,

<http://www.financemarkets.co.uk/2010/12/29/bcc-survey-reveals-2011-pay-freeze-for-many-companies/>

5) 영국통계청 웹사이트 <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asp?id=192>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해 1분기 0.3%, 2분기 1.1%, 3분기 0.7%의 회복세를 보여오다가 4분기에 들어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를 두고 통계청은 지난해 12월의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특히 서비스부문과 건설부문에서의 경기가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2월 1일 내놓은 보고서⁶⁾에서 설령 날씨 탓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성장세는 수출 증가에서 기인한 반면 감소세를 보인 서비스와 건설업의 경우 국내 소비에 더욱 의존하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IPPR은 세금 인상과 공공부문 재정지출 삭감은 가수와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고 지적했다. 재정정책연구소(IFS) 역시 보고서(Annual Green Budget)를 통해 연립정부에게 ‘플랜B’를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⁷⁾. 더블딥(double-dip)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IFS는 “앞으로도 한동안 예산책임청(OBR)이 예상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OBR의 예상치가 정부의 예산 입안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긴축재정안 외에 다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IFS는 공공지출 810억 파운드를 삭감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실행되기 엄청 어려운 일이며, 1990년대 초 존 메이저 총리 시절 시행되었던 삭감 계획안보다 더 달성하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경기가 일시적인 침체를 보이더라도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며 긴축정책⁸⁾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대한 어떠한 답

6) IPPR, Economic update: February 2011, http://www.ippr.org.uk/uploadedFiles/_homepage_content_panels/ippr-economic-update-15-110201.pdf

7) Daily Mail 2011년 2월 2일자 ‘Osborne DOES need a plan B for the economy, think tank warns’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352808/George-Osborne-fail-pay-deficit-general-election.html>

8) 지난해 10월 20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정부 부처 지출을 평균 20%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재정안을 발표했다. 연립정부는 2014~2015 회계연도까지 830억 파운드의 정부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약 50만 개를 축소하고 육아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1인당 약 3,300파운드인 대학등록금 상한선을 2012년부터 거의 3배인 9,000파운드로 인상한다는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을 통과했다.

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책임청(OBR)이 내놓은 올 경제성장률 예상치 2.6%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은 그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영국상공회의소(BCC)는 2011년 GDP 성장률을 당초 2.2%로 제시했다가 12월 보고서에서는 1.9%로 축소 발표했다. 영국산업연맹(CBI) 역시 1분기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0.3%에서 0.2%로 낮춰 발표했다⁹⁾.

그러는 가운데 서민들은 이미 급증하는 가계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불과 한 달 전 3.3%에서 3.7% 수준까지 올랐다.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는 올 초 물가상승률은 4%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¹⁰⁾. 또한 1월 4일부터 부가가치세는 17.5%에서 2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1주일에 7.5파운드의 추가 지출이 발생해 연간 389파운드(약 70만 원)의 부담이 더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및 자동차 보험료 역시 19.5%의 증가세를 보였고, 휘발유와 디젤에 부과하는 유류세도 새해 들어 3.9% 인상됐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역시 6.8% 올랐다. 가구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평균 소득은 연간 2%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인상되는 데 그쳐 지난 1년 반 사이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다. 머빈 킹 총재의 말을 빌리면 1920년대 이래 최악의 재정압박이 가구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수 증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연립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급락하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인 입소스 모리가 18세 이상 성인 1,162명을 대상으로 실시, 1월 27일 발표한 정당별 지지도 조사 결과¹¹⁾, 집권 보수당 지지도는 33%로 지난달에 비해 5%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5월 집권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반면 노동당 지지도는 4%포인트 증가한 43%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이 경제가 앞으로 1년간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답변은 24%에 그쳤다.

9) The Guardian 2010년 12월 20일 'Happy 2011: CBI sees high prices, low growth and rising rates'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0/dec/20/cbi-growth-inflation-interest-rates>

10) IPPR, Economic update: February 2011.

11) Ipsos MORI January 2011 Political Monitor <http://www.ipsos-mori.com/researchpublications/researcharchive/poll.aspx?oltemId=2718>.

■ 노동시장 회복세 둔화 전망

노동시장 역시 우울하긴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9~11월 3개월 동안 영국 내 실업자수는 전 분기와 견줘 4만 9,000명이 증가한 250만 명에 달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증가한 7.9%까지 높아졌다¹²⁾. 특히 이 기간 중 16~24세 청년층 실업자는 총 95만 명을 웃돌아 청년실업률은 지난 1992년 이래 최고치인 20.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상공회의소 데이비스 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전체 실업자수가 올해 2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을 상대로 한 구인, 구직활동 조사 결과에서도 노동시장 회복세 둔화는 확인된다. 지난해 말 토탈잡스(Totaljobs)의 조사 결과¹³⁾, 2010년에 일자리 공급은 약 1/5(19%) 증가했으나 2011년 초에 둔화세로 돌아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경쟁률은 11월 일자리 1개당 지원자가 19명에 달하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상승했다.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인원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다. 토탈잡스는 부가가치세 인상, 유럽 경제의 불안정성 등이 고용 및 소비 의욕을 떨어뜨리면서 노동시장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PR) 역시 고용에서의 더블딥(employment double-dip) 우려 때문에 앞으로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¹⁴⁾. 토디 돌핀 IPPR 수석 경제학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 실업률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연간 2% 이상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데, 2011년에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고 실업은 또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영국 경제에 놓인 실제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12) The Guardian 2011년 1월 19일자 ‘Youth unemployment hits record high’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11/jan/19/youth-unemployment-heads-towards-1-million>

13) Personneltoday 2010년 12월 28일자 ‘Job market recovery predicted to stall in 2011’

<http://www.personneltoday.com/articles/2010/12/28/57134/job-market-recovery-predicted-to-stall-in-2011.html>

14) IPPR 웹사이트 <http://www.ippr.org/pressreleases/?id=4309>

데이브 프렌티스 UNISON 위원장은 이 같은 실업률 증가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의 효과임을 역설하면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이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을 상쇄시킬 것이라는 당초 정부의 예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자발적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플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지난해 9~11월 동안 2만 6,000명이 늘어 116만 명에 달했다. 이는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1992년 이래 최고치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청년층 실업률이다. 청년층의 이같이 높은 실업률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 즉 1년 전에 불경기(recession)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생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 아론 포터 회장은 “대졸 취업시장이 극도로 악화돼 있음에도 정부는 국가부채 해소를 이유로 그 부담을 청년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정부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8~24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파운드 규모의 미래일자리기금(Future Jobs Fund)을 운영해 왔으나 3월에 종료하기로 했고, 16~18세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그나마 희소식은 대졸 취업 일자리가 지난해와 견줘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졸 신입 채용기업연합(Association of Graduate Recruiters)이 영국 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 한해 대졸자 일자리는 지난해와 견줘 3.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¹⁵⁾. 이는 지난해 말 일자리 공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인데, 그럼에도 높은 경쟁률 때문에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일자리에 대한 주도권을 사용자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년 동안 2만 5,000파운드(약 4,484만 원)에 머물러 왔던 초봉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브렌든 바버 영국노총(TUC) 위원장은 “청년층 5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15) BBC 2011년 1월 25일자 ‘Graduate job outlook ‘recovering’
<http://www.bbc.co.uk/news/education-12266766>

■ 맺음말

이상에서 2011년 영국 노동시장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회계연도가 매년 4월에 시작되는 영국의 2011년 예산은 오는 3월23일 확정 발표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예고된 것처럼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예산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몇몇 연구기관이 제언했듯이 노동시장 회복세가 더디고 성장률이 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또 다른 조치가 강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처럼 경제가 약세라면 오는 4월로 예정된 국민보험 기여분 인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견딜 만큼 충분히 탄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그런 가운데 노동계의 대대적인 반발 움직임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영국노총(TUC)는 <삭감은 해법이 아니다(Cuts are not the cure)>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3월 26일 런던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TUC는 이번 집회가 지난 수 십년 만에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TUC는 첫째, 정부 주장과 달리 현재 국가부채가 과거는 물론 다른 많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에도 낮은 수준이며, 그리스나 아일랜드와 달리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과, 둘째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지출 삭감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한 부담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브렌든 바버 TUC 위원장은 “긴축재정의 악영향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긴축재정의 정당성을 상실했고, 지난해 4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긴축재정이 아닌) 대안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 정부의 강도 높은 삭감방안에 대한 반발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11년 영국의 노사관계는 연초부터 노-정 간 정면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 **KLI**

16) The Economist, 2011년 1월 27일자 'Don't panic-yet' <http://www.economist.com/node/18010563>